

“리우회의 이후의 우리의 환경 대책”

박영호 한국환경, 사회정책연구소

I. 들어가는 말

21세기의 지구 사회의 미래를 점쳐볼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었던, 리우회의로 불리워졌던 유엔환경개발회의가 “남북간의 이해 대립”과 “각국간의 국가적 이해 대립”의 벽을 깨지 못한 채 막을 내린 것도 문제이지만 우리에게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역사 이래 최대 규모의 회의였던 리우회의가 끝난 지 3개월도 채 되기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벌써 지구 위기와 인간의 생명의 위협에 대한 경각심이 여론의 초점에서 벗어나고 있어 이 회의가 우리에게 던져준 도전이었던 우리나라 환경 정책의 대전환에 대한 기대가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지구적인 범주로 확대되어가는 각종의 환경파괴현상의 정도는 우리들의 종래의 인식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고 인간의 끝이 없는 욕망에 의해서 지구의 생명 유지 구조는 한계점에 달해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대안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며 여기에서 우리의 과제를 모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오늘날 지구 사회가 안고 있는 딜레마는 21세기의 지구 사회의 미래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지구 환경의 보전이 인류 공통의 최대의 중요한 과제라는 인식은 하면서도 그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국제적 합의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즉 지구 환경 보전이라는 총론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은 없으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 선정이나 해결 방법인 각론의 단계에서는 국제적 또는 국내적으로 의견 대립이 격심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세계가 인간의 행복한 미래를 위협하고 있는 12가지의 원흉인 ㉠오존층의 파괴 ㉡지구 온난화 ㉢에너지 ㉣대기 오염 ㉤사막화와 토양 침식 ㉥산림 파괴 ㉦물 부족 ㉧화학 물질 ㉨유독 폐기물 ㉩군사 지출 ㉪국제 채무 ㉫인구문제 등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인류가 살아남을 수 없다는 데에서 우리는 지구 환경 문제를 좌시할 수 없다는 공감대는 이루어졌다.

수지론

II. 유엔환경개발회의와 지구환경회의

이번 리우 데 자네이로에서는 두 개의 회의가 각각 동시에 개최되었다. 그 하나는 잘 알려진 각국 정부 대표자 회의인 유엔환경개발회의이고 또 하나는 세계 각국의 민

2 Page

Ⅲ. 리우회의의 주요 합의 내용과 정부 대표단의 활동 성과 (정부 발표)

*주요 합의 내용

	리우선언	의제 21
총괄	27가지 원칙	38개 분야
의미	지구 환경 보호를 위한 기본 지침 Global Partnership	리우선언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행동강령
경과	최종 준비회의 ('92. 4 뉴욕) 초안 그대로 채택 (민간 의견수렴 차단)	최종 준비회의('92. 4 뉴욕) 초안보 다 악화된 형태로 채택
주요 합의 내용	-지구 환경 피해에 대한 선진국의 책임 (원칙 7) 인정 -환경 보호를 구실로 한 일방적 무역 제재 조치 금지	-재정 지원: 선진국의 공적 개발원조를 국가별 GNP의 0.35% →0.7%로 상향조정 -기술 이전: -공공이 보유한 기술 실비 이전 -특허로 보호된 기술은 선진국에서 상업적으로 구입. 개도국에 비상업적으로 이전한다. -특허기술 중 협약상 의무 이행에 필수적 기술은 강제 사용한 후 추후 적정 보상 -해양 생물 자원 보호: 공해상의 과다 어로 행위 규제, 구체 사항은 별도 회의에서 논의

*정부가 말하는 활동 성과

	활 동 성 과
외 교	-선진, 개도국간 쟁점 사항 조정, 중재 역할 -본회의 의장단 피선 ('92 6. 9 본회의 주제)
기 술 이 전	-정부의 최대 역점 사항 -공공이 보유한 기술의 실비 이전 -특허로 보호된 민간 소유 기술 중 협약 이행에 필수적 기술은 특허를 해제 강제 실시 후 적정 보상
기후변화방지협약	-에너지 다소비형 제품 생산국가 특별고려 단서조항 -화석에너지 다사용 36개 국가 (선진국)에서 제외 -화석연료 사용규제 완화 -에너지 효율기준 설정 완화
무 역 규 제	-국가간의 환경기준 차이에 의한 무역규제조치 조항 삭제 -정부의 보조금 사용금지 조항 삭제
해양생물자원보호	-‘유엔 해양법’의 일반원칙 준수선에서 타결 -원양어업의 위축방지

4Page

외무부의 환경대사의 말에 의하면 이번 회의에서의 외교적 노력으로 얻어낸 성과에서 보듯이 당장의 규제에서의 유예(5년~10년)는 받았다고 보고 있으나 앞으로 유엔환경개발회의의 후속 조치를 조기에 추진키로 하는 등의 지구 환경 보전 노력이 가속화될 경우에 대비해야 하며 3년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가입하여 선진국 대열에 서게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Ⅳ. 정부가 발표한 환경 대책들

리우회의 이후 우리 정부의 해당 부처에서는 많은 환경 대책을 수립 발표한 바 있다.

(가)국무총리의 보고에서 보면 향후 대책으로서 국제 환경 질서를 조기에 국내 정책에 수용하고 향후 기후변화협약 내용의 구체화등에 따른 에너지 사용 및 산업 구조 조정 등 장단기적 대책과 “리우선언”과 “의제 21”의 경제, 환경, 사회적 이행 방안을 강구함에 있어 “범정부적 특별 대책 기구”를 구성, 운영하여 현재 추진중인 각종 대책들을 종합적으로 보완·발전시키고 정부, 기업, 국민이 함께 경제적·환경적·외교적으로 대처해 나감으로써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최소화와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국제환경규제를 오히려 신시장 개척의 계기로 활용하는 등 지구 환경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다각적 대응방안을 강구한다고 한다.

(나)외무부 장관에 의하면 새롭게 형성되는 지구 환경 질서와 환경 규제로부터 신흥 개발국의 개발권을 확보하고 부당한 의무 부담을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환경 외교를 환경대사제도를 활용하여 강화시키고 또한 지구 환경 문제에 대한 외교적 대응과 동시에 양자 및 지역적인 환경 협력 강화를 추진함으로써 우리의 입지 강화와 실리 확보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유엔개발계획(UNDP)과 유엔환경계획(UNEP) 등 유엔기구와의 협조 및 동북아시아 지역의 환경협력기구 설치를 추진하는 한편 일본과의 환경협력협정 체결을 계기로 여타국과의 협정 체결도 추진하며 유엔 환경 계획과 계속 협조하여 남북한 공동의 비무장지대 생태계 조사와 자연공원 조성 가능성 조사 사업을 추진한다고 한다.

경제 부총리는 ①에너지 절약형 경제 구조로의 개편 추진 ②환경 기술 개발 투자의 촉진 ③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재활용 촉진책 등을 마련하여 UR 협상의 경험을 살려 정

부 입장이 일관되게 제시될 수 있도록 정부 내에 협상 대책을 종합 조정하는 대책 기구의 설치와 함께 각 협약별 전문 협상팀을 구성 운영할 것이라고 한다.

환경처 장관이 발표한 환경 정책의 기초를 보면 ①환경 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 산업구조, 에너지 정책 수립, 국토 이용 계획 등에서 개발 시책 유도 ②환경 영향 평가제, 개발 시책의 사전 협의제 등을 통해 오염 예방 행정의 강화 ③환경 규제 기준의 선진화와 환경 기초 시설 확충을 위해 저공해 기술의 개발과 육성, 지원 시책의 적극화 유도 ④국제 환경 정보 동향등과 국내 환경, 경제 정책의 연관 대응 체계의 구축 및 전문가 양성 ⑤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 시책의 강화 및 국제 환경 협력 증진을 활성화 시킨다는 것이다. 환경처는 이미 수립된 중기 계획 (91~95)을 92~96기간의 계획으로 수정하면서 맑은 물 공급, 폐기물 감량화, 재활용 촉진 및 체계적 환경 관리를 위한 각종 시책 사업 등을 크게 보완하기로 했다. 이 사업의 총투자소요는 공공·민간 부문을 망라하여 12조 1천 9백 17억원에 달하며 이중 공공부문의 투자 소요는 6조 7천 94억원으로서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 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계획되어있다. 부족한 부분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한 환경개선부담금,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으로 충당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여러 부처가 오늘의 새로운 국제 질서로서 부상한 지구 환경 문제와 환경권에 대한 인식이 고조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다각도의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

V. 먼저 해결되어야 할 기본 문제들

우리 정부는 90년대의 지구 환경 문제가 인류 장래의 생존과 번영의 가능성을 크게 좌우하는 문제로서 국제 정치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므로 그와 관련된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고 국제적인 환경 규제를 빚겨가는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지난 30여년간의 우리나라의 산업화 과정에서 병이 들대로 들어버린 우리의 환경 문제를 바로 잡는 일도 더이상 외면할 수 없는 과제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 모든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 ①정부가 제3차 국토종합개발사업이나 금년부터 실시되는 제7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집행 과정에서 도로, 항만, 공업 단지 등 각종 대단위 개발 사업을 환경 영향 평가 없이 진행시킨 것과 같은 경제 성장을 위한 환경 훼손은 아랑곳하지 않는 지금까지의 환경적인 행정은 중단해야만 한다. ②환경처의 기능이 지금과 같이 행정 조정 기능이 아

나라 강력한 정책 수립 및 집행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 조직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③정부의 환경 보전에 대한 철학과 의지 부재가 또한 문제인데 이러한 현상은 환경 보전 대책의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리우회의가 열리고 있는 중에 정부가 발표한 ①환경적인 정책 발표에서도 나타난다. 예를 들어서 공업 입지 개발 지침 완화, 개발 제한 구역(Green Belt)내 폐기물 처리 시설 적극 추진책, 골프장 시설 기준 완화, 규제 조항이 없는 환경영향평가법안 제시,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을 대폭 완화시킨 사항 등이다. ④환경 관련 법안들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문제이다. 기업이 오염 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그 시설을 운영하기보다는 법을 위반하고 벌금을 내는 쪽이 보다 비용이 적게 들게 되어 있는가 하면 건설부나 토지개발공사 등의 정부 기관들이 법을 앞서가며 위반하고도 무사할 수 있는 법들이어서 위반사례가 89년 9건에서 90년 60건, 91년도에는 101건으로 늘어나는 원인이 되고 있다. ⑤환경 행정의 비민주성과 비공개성인데 군산 동양 TDI 공장 문제, 안면도 핵폐기물 처분장 건설 문제,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문제 등이 행정부의 밀실 행정의 대표적인 ②예들일 것이다. ⑥무원칙한 환경 예산 편성은 이 나라의 환경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하고 있다. 본예산 대폭 삭감→대형 오염 사고 발생→추경 예산 편성→본예산 삭감의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 환경처 예산이 90년도 902억, 91년도 2천 4백 34억(폐물사건시 집행액), 92년도 805억원 그리고 93년도 요청액이 91년도의 집행액보다 적은 2천 4백 6억원인 것에서도 짐작할 수가 있다. 각 부처에 분산되어있는 환경 시책과 투자 사업을 종합 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중기종합계획(92~96)기간의 총투자소요액은 12조 1천 9백 17억원인데 이에 대한 집행이 어떻게 ③집행되고 있는지를 환경처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과연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④이를 검증이 시급한 일이다.